

데스크 시각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난 2000년 특별법인(정부 지원 30%, 자체 수익 70%)으로 전환된 이후 독자경영을 해야 하는 탓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서다. 한 해 예산 630억 원(2011년)이 투입되는 '공공조직'의 수지를 맞추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화려한 명성 뒤에 감춰진 예술의 전당의 '불편한 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예산 76% 지원받는 스미스소니언

지난 2006년 2월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당초 은행가 출신의 로렌스 스톨 재단대표를 취재하기로 돼 있었지만 재단을 후원하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는 바람에 국제협력부 디렉터가 대신 기자 일행을 맞이했다. 워싱턴 D.C에 자리한 스미스소니언은 19개의 박물관(미술관)과 연구소를 거느린 글로벌 랜드마크다. 한 해 방문객이 2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스미스소니언이 여느 복합문화기관들과 다른 점은 국립기관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미국 문화예술기관이 기업의 기부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1846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스슨은 유산 50만 불을 미국에 기증하면서 "전 세계인을 위한 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데 써달라"는 뜻을 남겼다. 문화예술기관을 지원한 전례가 없었던 미 연방의회는 고심 끝에 특별법령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내놓았다. '스미스소니언 1년 운영비의 약 64%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12%를 정부기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스미스소니언에게도 남모르는 '고충'이 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연방의회가 효율성 등을 이유로 종종 보조금을 깎기 때문이다. 70% 이상을 지원받는 국립기관이지만 살림살이가 버겁기는 여느 법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문화예술기관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전당 재정지원 명문화해야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당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전당을 국립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법치보다는 정의가 바로서야

까운 심정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의'가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불연치' 때문이다. '정의'는 '진리'와 같이 결코 언제나 일정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만이 '정의'의 독점권이나 특허권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견해, 상충되는 견해가 존재해야 하며, 그 상충되고 충돌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다. 그러기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할 점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인권의 존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이 무시되면 '법치'도 아니고, '인권'이 없다면 '민주'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집권자들은 '법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법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정의로운 마음과 공정한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자들이 앞치락뒤치락하는 약육

강식과 하극상의 시대였던 살벌하고 참혹한 춘추전국시대에 탄생한 법가의 치국이념의 기초엔 '공개, 공평, 공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물며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현대사회에서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법치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된다면 법치는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우리는 존경과 환호를 보낸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으로 아무도 성공하리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성취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의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원인이 되었던 '비이성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현실을 왜곡할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용하면 위험하고 불필요한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2011년 뇌장암으로 죽었다. 그는 2003년 뇌장암 진단

물론 법인으로 가변 자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관도 하기 전에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인화를 추진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결집'도 되지 못한' 아기에게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 전당의 금고를 '알아서' 채워 넣으라는 얘기가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당은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느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위상과 크게 다르다. 미 의회가 스미스소니언의 공적인 가치에 주목한 것처럼 정부 역시 전당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특별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제로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특별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게 전당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전당의 운명은 올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립기관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민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사실 언제부터나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광주의 미래가 걸린 대역사(大役事)이지만 전당 콘텐트와 법인화 등의 '빅이슈'에 대해선 팔장을 끼고 있어서다. 지역의원들에게 이번 국회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 가을 '그대들의' 숨겨진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jhpark@kwangju.co.kr

社說

‘국립’ 광주과학관 정부가 지원 외면하다니

개관이 지연됐던 국립광주과학관이 완공 1년 만인 15일 문을 열었지만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운영비 지급을 미루면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연체돼 '반쪽 개관'에 그칠 우려가 큰데다 타 과학관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오흥동에 들어선 광주과학관은 지난해 10월 완공됐으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마찰을 빚으면서 1년 동안 개관이 연기됐다. 현재 광주과학관은 운영비 등이 없어 직원 월급 5억 원을 주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장을 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최은철 광주과학관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선 광주시가 운영비 부담분(40%)을 먼저 내면 국가 부담분을 주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올 12월 추가경정 예산 때 확보해서 주겠다고 한다"면서 "(기재부에서) 광주시

의 (지급 약속) 공문을 받아오라고 해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국비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과학관이 국립시설인데도, 기재부가 광주시에 40%의 분담비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약속한 지급 공문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처사는 지역 차별이나 다를 바 없다. 국립인 대전과 과천과학관은 정부에서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 특히, 기재부가 광주과학관과 같은 조건으로 개관을 준비 중인 대구과학관의 경우 운영비에 직원의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킨 반면 광주과학관은 운영비에서 이를(연간 3억 원) 제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지는 불이익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늬만 국립일 뿐이다. 정부는 운영비 100% 지원을 천명하고, 미지급 운영비를 속히 지원해야 한다. 그게 곧 국립으로서 애초 취지와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신종 사이버사기 범국가적 대응 시급하다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웬사이트를 클릭하면 일정 금액이 소액 결제로 빠져나가는 스미싱은 907건에,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도 올 들어 9월 말까지 55건에, 3억1000만 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전남경찰청 관내도 올 들어 발생한 351건의 스미싱 사건으로 입은 피해액이 5300만 원에 이르고, 파밍 사건도 57건이 발생해 모두 3억576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대부분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법인 검거가 쉽지 않다.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갈 정도로 범죄집단의 치밀성 또한

허를 내두를 정도다. 하지만 이처럼 변종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려도 당국의 대응태세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대처방식도 당국 따로, 사업자 따로 식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점차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사이버사기꾼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대비책을 해킹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당국, 수사기관, 금융,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이버사기 경보시스템을 사안별로 세분화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30만 원 소액사기라고 알잡아 보다가 단기간 누적 피해로 인해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은펜클럽



최희동 전남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맹자는 “정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 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주는 메시지도, 정부의 눈란, 동양그림 사해, 교회사역사교과서 문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지, 인사의 난맥 등을 보면서 진실과 정의보다는 사적 이익에 우선하여 국민을 편 가르키 하는 행위는 아닌지 참으로 안타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죄와 책임을 시인한 나치 권력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치 왕국'의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재판에서 "단지 총통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모두를 속인 히틀러에게 있다"는 변명을 일관했다. 유대인 수백만 명의 체포와 강제이주를 지휘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역시 "내 죄는 나의 복종, 국가와 공무원 신서에 대한 복종이다"며 "나는, 나의 복종심을 잘못 사용한 통치자들을 고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의 오펜팔이서는 법에 넣어 먹거나, 잘게 찿어 설탕과 함께 재유 효소를 만들면 되고, 딱지 채 잘 밀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먹어도 좋다. 옛말에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식품과 약의 기원이 같다는 말인데, 오늘 저녁밥 지을 때 밥 위에 작두콩 몇 알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고인들은 자제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무적이고 관료적인 무자비함, 약의, 그리고 학살욕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뉘른베르크 법정도 "진정한 결정이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할 때 도덕적인 선택을 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힘으로써 "나는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을 일축했다. 나치의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복종, 국가와 공무원 신서에 대한 복종이다"며 "나는, 나의 복종심을 잘못 사용한 통치자들을 고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는 몰랐다



권력자를 추종하던 이들이 정권이 몰락하고, 기업이 파탄 내면 책임을 지기는 커녕, 또 다른 자리를 찾아 서둘러 떠나는 것도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의 몰락에서 보듯, 몽매한 권력자와 무책임한 부하는 한 쌍이다. 언제나 고생하는 건 불쌍한 백성 뿐이다.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기고



김은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동네 부근에 있는 뒷밭을 지나다 보면 아주 커다란 작두처럼 생긴 공작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생각대로 이름 붙은 작두콩이다. 6월에 꽃을 피워, 10월경이면 수확할 수 있는 한해살이 덩굴성 콩과 식물인데, 몸 자체도 서리태나 대두와 같은 일반콩보다 2~3배 정도 커서 처음 보면 신기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 작두콩이 민간요법에서 축농증과 비염뿐 아니라 치질이나 종기와 같은 화농성 염증에도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다 작두콩은 전국 생산량의 43%가 광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잠는 작두콩

광주의 특산물이다. 따라서 작두콩의 생리활성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건강기능 식품이나 대체의약품의 원료로 개발할 수 있다면, 작두콩의 부가가치를 수십 배 높일 수 있고, 광주지역의 고소득 창출 작목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연구원이 작두콩의 생리활성 기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이었다. 우선 작두콩의 항산화활성과 항균활성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항산화 활성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α-토코페롤과 비슷한 만큼 높은 활성을 보였고, 항균활성 또한 13종의 식중독균에 대해 항균력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세균성 이질균과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항균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우리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단과 학연구단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생각지도 못 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작두콩에 포함된 단백질 중 하나가 바이러스와 잘 흡착하는 좋은 특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

래서 작두콩 단백질을 코팅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식품 중에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흡착시키면 우리 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인 농축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들어 집단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주요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것이 알려진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식품 중의 노로바이러스를 농축하고 검사하는 데는 2~3일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작두콩의 단백질을 이용한 검사키트를 사용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했더니 농축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병원 또는 기업체 같은 단체급식시설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수백 건의 검체가 한꺼번에 의뢰된다 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검사를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끝내 안전성이 확인된 음식만을 제공하는 예방 시스템의 토대

가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이제 이 검사방법의 민감도와 정확성만 확인되면, 전국의 모든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시험법으로 등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물론 앞으로도 비염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순수 분리하여 대체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등 작두콩에 대해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두콩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다른 많은 작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특별한 기능이 있는 다른 작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지인들이 종종 뒷밭에 작두콩을 조금 심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가정에서 쓰는 밥에 넣어 먹거나, 잘게 찿어 설탕과 함께 재유 효소를 만들면 되고, 딱지 채 잘 밀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먹어도 좋다. 옛말에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식품과 약의 기원이 같다는 말인데, 오늘 저녁밥 지을 때 밥 위에 작두콩 몇 알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영화관 심각한 공기오염 대책 마련 시급하다

어느 공간이던지 밀폐된 곳일 경우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그곳의 공기오염은 심각한 수밖에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극장에 자주 가는데 영화관을 갈 때마다 공기가 탁해 목이 칼칼함을 자주 느낀다. 기침도 나고, 심지어 환사가 심할 때 느껴지는 먼지 냄새마저 난다.

영화관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완전 밀폐돼 있다.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1년 365일 내내 자외선을 쬐지 못하니 공기는 웬만큼 신장 쓰지 않으면 극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영화관이다. 거기다가 바닥에 죄다 카펫을 깔아놓고 있으니 먼지나 각종 오염 대장균

이 득실거릴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의자가 놓여져 있어 바닥이 평평하지도 않으니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니 그 공기오염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 영화관은 다중 이용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상영관에 들어서서 순간 2~3시간 공간에 갇힌다. 참문 하나 없다. 공기를 면 극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영화관이다. 신선도가 점차 떨어지는 공기를 맑게는 500여 명이 함께 나눠 마시는 셈이다.

공기가 정제되면 오염물질도 축적되고 밀폐된 실내 공기가 혼탁해지므로 공조시설로 온도습도가 잘 조화된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기존 공기는 강제 배출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해주는지 궁금하다. 영화관에서 고객들의 호흡기 환경을 위해 잘 알아서 해주리라 믿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영화관의 공기 오염에 대해 항상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란다. ▲이학식·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600) (F A X 2200-55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